

핵안보협력연구  
핵안보정상회의와  
중견국가 외교

한 인 택



핵안보협력연구

- 핵안보정상회의와 중견국가 외교



# 목차

I. 핵안보와 핵안보정상회의 .....	1
1. 핵안보의 개념 .....	2
2. 핵테러와 핵안보 .....	4
3. 핵안보 협력의 장애요인 .....	6
4.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개최배경 .....	10
II. 대규모 다자 정상회의: 역할과 한계 .....	14
III. 중견국가 외교 .....	19
1. 중견국가의 개념 .....	19
2. 중견국가로서 한국 .....	21
3. 한국의 중견국가 역할론 .....	22
IV. 핵안보정상회의와 한국의 중견국가 외교 .....	24
1. 정상회의와 중견국가 .....	24
2. 핵안보 협력을 위한 의장국 한국의 역할 .....	26
참고 문헌 .....	31



G20 정상회의의 개최와 핵안보정상회의의 개최를 계기로 국제금융과 핵안보 분야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문제해결역량이 크게 고양되었다. 따라서 많은 연구들이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편이나 핵안보 레짐의 형성에 있어서 이들 정상회의가 갖는 의미, 전망, 그리고 한계점 등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김치욱, 2009b; 전봉근, 2010; 전봉근, 2011a; 전봉근, 2011c; 조현, 2011). 그러한 일반적인 연구들과 다르게 이 연구의 관심은 대형 정상회의가 개최국가, 즉 우리나라에게 주는 외교적 함의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핵안보정상회의와 같은 대규모 다자 정상회의의 개최가 중견국가인 한국의 외교에 주는 의미와 효과는 무엇인가? 보다 구체적으로 물으면, 중견국가 외교전략의 일환으로서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가 갖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극소화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이 연구를 통해 답해보고자 한다.

## I. 핵안보와 핵안보정상회의

2010년 미국의 주도로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핵안보를 주제로 한 대형정상회의가 개최된 것은 워싱턴 회의가 최초로 이 회의는 핵안보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전 세계적으로 태동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워싱턴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의 이행을 점검하고, 합의가 미진했던 분야에 대해 새로이 합의도출을 시도하며, 워싱턴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새로운 의제들도 도입되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전봉근, 2010; 전봉근, 2011c).

그동안 핵을 둘러싼 여러 주제—특히 핵비확산과 비핵화—에 대하여 정상회의를 비롯하여 다양한 국제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핵안보에 대해서는 2010년에서야 본격적인 국제적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핵안보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늦어진 이유 중의 일부는 ‘핵안보’라는 개념이 생소할 뿐만 아니라 유사한 개념과 혼동되기 쉬우며, 핵안보의 절실성에 대한 인식도 국가별로 상

이하기 때문이다. 핵안전이나 핵비확산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잘 이해되고 있고 국가와 상관없이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그에 반해 핵안보에 대해서는 이해도 부족하고 후술하겠지만 국제적 공감대도 약하다. 따라서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에 이어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도 핵안보 국제협력을 낳는 데에 필요한 인식적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가 될 것이다.

## 1. 핵안보의 개념

핵안보란 IAEA에 의하면 핵물질, 방사성물질, 핵시설 등에 대한 절취, 사보타주, 무단접근, 불법이전, 기타 악의적 행동의 예방, 탐지, 대응 등을 위한 조치라고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핵안전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핵안전이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사태처럼 ‘사고’를 방지하는 조치라면, 핵안보는 핵물질, 방사성물질, 핵시설 등에 대한 악의적인 의도적 행위-예컨대 공격-를 저지하는 조치이다. 한편 핵비확산은 북한이나 이란 같은 국가들이 핵무기 개발하는 것을 저지하는 조치를 뜻한다. 또 비핵화란 북한과 같이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갖고 있는 핵무기를 폐기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핵감축(또는 핵군축)은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의 수를 줄이는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해 핵안보란 국가가 아니라 비국가행위자-예컨대 테러집단-들에 초점을 맞추고 이들이 핵무기에 사용할 핵물질을 획득하는 것을 막는 조치를 의미한다.

그동안 핵안전, 핵비확산, 비핵화에 주로 관심을 가져왔던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에게 비국가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핵안보란 생소한 개념이다. 또 핵안전 등 유사한 개념과 구분하여 핵안보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경우라도 핵안보의 절실성에 대해서는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컨대 2010년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핵테러를 최고의 국제안보위협으로 규정하고, 핵안보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핵안보를 절실하게 생각하는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핵발전소가 없는 국가들에게 핵안전이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핵무기급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국가들에게는 핵안보란 커다란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테러집단의

악의적 행동으로부터 지켜야 할 물질이나 시설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핵무기급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테러집단과 같은 비국가행위자의 위협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도 핵안보가 절실한 의미를 가지고 다가 오기 힘들다. 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테러집단의 위협보다는 이웃나라의 재래식 무기가 더 실질적 위협일 수 있으며, 핵안보를 위하여 사용할 재원을 국방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를 원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국제협력의 제도화가 패권국가의 노력에 의하여 시작된 사례가 많다. 19세기에는 영국의 패권 아래서 자유무역체제가 탄생하였으며, 20세기에는 미국의 패권 아래서 무역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다자적 협력체제 - 국제레짐 - 가 제도화되었다. 따라서 핵안보 국제협력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하기 쉬우나 - 특히 미국이 주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기 쉬우나 - 앞에서 언급한 이유들로 인해 핵안보를 자유무역처럼 ‘글로벌 공공재’라고 생각하기 힘들다. 핵안보는 오히려 일부의 국가에 필요한 ‘사용재(私用財)’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안보 강화에 관한 논의 - 특히 핵안보 레짐의 구축에 관한 논의 - 가 국제적으로 거론되는 중요한 이유는, 핵안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핵안보의 ‘공급’에 세계각국이 모두 참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비현실적 가정이지만 핵테러를 계획하고 있는 테러집단이 있다면 그들은 공격에 필요한 핵물질을 아마도 우리나라가 아니라 핵물질에 대한 방호가 허술한 제3의 국가에서 획득하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획득한 핵물질을 가지고 핵무기를 제조하는 것은 비밀스러운 작업이 가능한 또 다른 제3의 국가를 골라 그곳에서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경우 핵안보는 우리나라가 향유하는 사용재라고 하겠지만, 그 공급을 위해서는 제3국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 제3국이 어느 나라가 될 지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핵안보의 ‘공급’에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참여하여야 할 필요성이 발생한다. 이러한 핵안보의 성격 때문에 후술하듯이 핵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은 용이하지 않으며, 핵안보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최국으로서 한국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있다.

## 2. 핵테러와 핵안보

2010년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핵테러의 심각성이 강조되고, 핵안보의 중요성이 주장되었다. 핵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핵안보에 대한 우려는 소련이 해체되던 시기에 증가하였다가 구공산권 지역에서 국가권력이 재건되면서 대부분 감소되었다. 소련이 해체되던 시기에 핵안보에 대한 우려가 증가한 이유는, 소동구 지역에서 국가권력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핵무기나 핵물질에 대한 통제가 상실되어 심한 경우에는 핵무기나 핵물질이 암시장에서 거래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었다. 실제로 핵무기나 핵물질이 암시장에서 거래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소련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으로 인해 핵무기나 핵물질의 절취나 거래는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비하여 성공적으로 수행된 핵안보정책으로서 미국의 ‘협력적 위협감축(CTR: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전봉근, 2011b). 그런데 과연 이 시기의 핵안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지금의 핵안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의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그 이유는 이 시기의 핵안보 노력은 비국가행위자에게 핵물질이나 핵무기가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려는 동기보다는 핵야망을 가진 국가들이 핵물질이나 핵무기를 획득하지 못하게 하는 동기가 더욱 강했기 때문이다. 즉, 이 시기의 핵안보 노력은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논의되는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핵테러의 방지보다는 통상적인 의미의 핵비확산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핵테러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게 된 계기는 9.11 테러이다. 9.11 테러는 테러행위가 후진국이나 분쟁지역이 아니라 선진국의 한복판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9.11 테러 이후 알카에다가 핵물질을 확보해서 핵폭발장치를 개발하려고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주장이 다수에게 신빙성을 갖게 된 배경으로는 1993~2008년 기간 중 IAEA에 보고된 핵물질, 방사성물질의 분실과 도난 사건이 수백 건이 넘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물론 분실과 도난이 반드시 테러집단에 의한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예컨대 IAEA에 보고된 핵물

질의 분실과 도난은 실은 핵개발에 관심을 갖는 국가기관에 의한 것일 개연성이 크다. 하지만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집단이 실재하고, 그들이 획득만 할 수 있다면 핵무기나 핵폭발물질을 사용하고자 시도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실제로 핵물질과 방사성물질의 도난과 분실이 빈번했다는 점을 토대로 해서 9.11테러 이후 핵테러의 위협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2010년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고농축 우라늄과 분리 플루토늄 등 분열성 핵물질을 이용한 핵테러를 최고의 국제안보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비국가행위자 즉, 테러집단에 의한 핵분열물질의 획득을 막는 데 논의가 집중된 것이다.

핵테러의 위협에 대응하여 기존의 군사적 대응전략인 핵억지(nuclear deterrence)를 대신에 핵안보가 선택된 이유는 테러집단에게 억지가 비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공격에 대한 보복을 통한 억지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1) 상대방에 대한 보복이 가능하고 (2) 보복을 당하는 것이 확실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공격의지가 상실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리적으로 위치가 고정된 국가들과 달리 테러집단은 지리적 위치도 정체도 파악하기 힘들다. 따라서 테러집단의 공격이 있어도 그들에 대한 확실한 보복은 쉽지 않다. 더욱이 보복이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테러집단이 공격의지를 상실할 것으로 기대하기 힘들다. 수많은 자살테러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테러리스트는 보복을 당하여 장렬히 전사하는 것을 오히려 목표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보복의 가능성이나 보복에 의한 공격의지 억제효과에 있어서 핵억지는 핵테러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남은 대안으로 선택된 것이 미국의 경우는 핵안보와 좀 의외로 여겨질지 모르나 공공외교이다. 핵안보의 요체는 테러집단이 핵무기, 핵물질, 방사성물질을 처음부터 획득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핵테러를 시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취, 사보타주, 무단접근, 불법이전, 기타 악의적 행위를 통해서 테러집단이 핵무기, 핵물질, 방사성물질, 핵시설을 손에 넣는 것을 막는 조치가 필요하다(Allison, 2004; Allison, 2008). 한편 미국은 적극적인 대(對)중동 공공외교를 통하여 자국의 이미지를 개선하여 미국이 테러집단의 증오와 적대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줄이는 노력도 병행하였다. 구체적인 핵안보 조치에 비해 공공외교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작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훗

씬 더 중요한 효과를 낼 수 있다.

2010년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가 소집된 이유는 9.11 테러 이후 핵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이 중요한 이유이지만 핵안보에 관심이 지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 오바마 대통령의 선임자인 부시 대통령의 경우 주된 관심은 핵비확산과 비핵화에 있었고 핵안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다. 그에 비해 오바마 대통령이 초선 상원의원이던 시절 최초로 발의한 법안이 구소동구 지역의 핵물질 안보를 지원하는 법안이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오바마 대통령은 당선 이전 시절부터 핵안보에 관하여 개인적인 관심이 많았다.

### 3. 핵안보 협력의 장애요인

핵안보 강화는 기술적, 행정적으로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쉽지 않은 과제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절에서 살펴보게 되는 문제들로 인해서 국제적 협력을 통한 핵안보 강화에는 많은 장애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 (1) 혜택과 비용의 불균형

핵안보 강화는 바람직한 것이지만 핵안보 강화를 통해 얻게 되는 혜택은 소수의 국가-미국같이 국제적으로 테러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국가-들에 편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론적으로 어느 나라도 핵테러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핵테러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큰 나라는 소수-아마도 유일하게 미국-에 불과하다. 그런데 미국의 안전을 위해서 미국 내 핵안보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 미국에 대한 핵테러 공격이 있다면 그에 사용되는 핵물질은 미국이 아니라 다른 국가-예컨대 국가권력이 취약한 후진국-에서 획득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핵안보의 직접적인 수혜국가가 소수이거나 유일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전 세계에서 핵안보가 강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즉, 전 세계적 핵안보 레짐의 형성이 필요하다. 문

제는 지금 상황에서 핵안보 강화를 위해 드는 비용을 각국이 스스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데에 있다. 특히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핵물질 관리의 기본적 책임이 개별 국가에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였고 개별 국가의 책임하에 각국 내 핵물질 관리 제도가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각국이 핵안보 강화를 위한 책임을 지고 소요되는 비용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국가들에게 책임과 비용의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과거에는 단순히 핵물질, 방사성물질과 관련 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physical protection)에 치중하여 왔었다. 그러나 핵안보가 강조되면서 물리적 방호를 훨씬 넘어서는 조치들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경제적, 비경제적 부담이 급증하게 되었다. 언급하였듯이 핵안보란 외교, 군사, 과학, 기술 등의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핵물질, 방사능 물질, 그리고 관련시설에 대한 일체의 악의적 행동을 탐지, 저지, 대응, 사후조치를 망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작업 계획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전봉근, 2010).

- 핵물질 저장시설의 통합
- 핵물질 이송 시 안전과 방호 보장
- 핵물질 사용 중단 시설에서 핵물질 제거와 처분
- 분리 플루토늄의 방호와 계량에 특별한 주의
- HEU용 연구로와 기타 HEU 사용 시설을 기술·경제적으로 가능 시 저농축 용으로 전환
- LEU 또는 확산저항성(proliferation-resistant) 기술 개발 및 사용
- 방사성물질의 안보 추진
- 효과적인 국가 핵안보 규정 제정
- 핵안보 규제기구의 독립성 극대화
- 핵안보 규제역량 구축 및 전문가와 자원 공급 보장

많은 국가들이 전통적인 물리적 방호를 강화하는 것만도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훨씬 더 포괄적이고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핵안보를 강화하는 것은 벅찬 일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개발도상국으로서 핵안보는 고사하고 재래식 안보, 인간 안보에도 여력이 없기 때문에 핵안보 강화에 따르는 부담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들로서는 그들의 갖고 있는 한정된 자원을 실질적 혜택이 적은 핵안보 대신 당장 필요한 통상적인 국방과 경제발전에 투입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할 것이다.

## (2) 상이한 우선 순위

형편이 좀 나은 국가들의 경우라도 핵안보보다는 핵안전이나 핵비확산, 비핵화가 더 시급한 과제일 경우가 많다. 특히 후쿠시마 사태 이후 핵안전을 강화하고 핵사고의 발생 시 국제적 협력체제의 구축,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필요가 도처에서 대두되고 있다. 또 비록 우리가 핵안보정상회의의 의장국이지만 우리에게도 핵안보보다는 핵안전, 핵비확산, 비핵화가 더 절실한 실정이다(한인택, 2011). 테러리스트에 의한 가상적인 핵테러 위협보다는 북한의 재래식 또는 핵 공격이 우리에게 더 심각한 위협이고 따라서 우리가 가진 자원을 북한의 공격을 억지하고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데에 투입하여야 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 핵안전이나 핵비확산이 절실하지 않은 국가들도 핵감축이—특히 미국의 핵감축이—크게 진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 국제사회가 미국을 위한 핵안보 강화에 나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들은 핵감축과 핵안보를 동시에 진행하거나 핵감축을 핵안보 강화의 선행조건으로 요구할 수도 있다(Han, 2009).

결국 핵안보 강화는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혜택에 있어서는 소수 국가로 편중되며, 그에 따르는 비용부담은 원하진 원하지 않건, 그리고 부담할 여유가 있건 없건 간에 다수의 국가가 하게 될 전망이다.

## (3) 국가실패

혜택과 비용 간의 불균형, 상이한 우선순위의 문제는 핵안보 강화를 위한 궁극적으로 국제협력에 참여하는 국가의 선호와 의욕의 문제를 낳는다. 다른 나

라의 안전을 위해서 자국이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경우 또 자국의 선호와는 달리 다른 나라가 선호하는 사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노력하기를 요청 받을 때 대개의 경우 국가들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핵안보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

하지만 선호와 의욕의 부족보다 더 심각한 위협은 국가실패이다. 국가실패가 발생할 경우 설령 핵안보 강화에 대한 선호와 의욕이 있더라도 핵안보를 위한 국제협력에 참여할 수가 없어진다. 국가실패는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지만 이 글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핵무기와 핵물질을 방호하는 국가통제력이 약화되거나 붕괴되는 경우이다(한인택, 2010b). 역사적으로 보면 핵무기와 핵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때는 소련동구 국가들이 붕괴하던 시기였다. 국가권력이 무너지면서 핵무기와 핵물질에 대한 통제와 방호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소련동구 국가가 붕괴했던 경우처럼 여러 국가가 연속해서 약화되거나 붕괴하는 경우가 다시 반복될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왔지만, ‘아랍의 봄’의 발생은 그러한 가능성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을지 모른다는 추측을 낳게 한다. 그리고 소동구 국가가 붕괴한 것처럼 연속적인 국가실패까지는 발생하지 않더라도 개별 국가의 국가기능이 마비되는 경우는 항상 가능하다. 예컨대 국가 내부에서 권력분쟁이 있거나 심한 경우 내란이 발생하는 경우에 핵무기와 핵물질에 대한 국가통제력이 약화내지 상실될 수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경우라도 외부의 공격으로 인해 국가기능이 마비될 수도 있다. 내란에 의한 것이건 외란에 의한 것이건 간에 국가의 통제력이 약화될 때 핵무기와 핵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이 급증한다. 만약에 그 나라에 핵무기나 핵물질이 없더라도 그 나라가 혼란에 빠진 틈을 타서 테러집단이 그 나라에서 핵무기를 제조할 수도 있다.

이런 논의가 시사하는 바는 핵안보의 강화가 유인체계를 합리화하고 선호를 조정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취약한 국가들의 대내적 안정과 대외적 안전까지도 포괄하는 복잡하고 거대한 문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우선 국가능력이 온전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핵안보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시작하는 방안이 일단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을 것

이다. 하지만 취약한 국가를 빼고 핵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사슬에서 온전한 고리만 골라서 강화시키면서 사슬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사슬이 가장 약한 고리에서 끊어지는 것처럼 핵무기와 핵물질은 가장 취약한 국가에서 유출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핵안보는 가장 취약한 국가에서 가장 우선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처럼 핵안보와 국가실패를 연결시킬 경우 핵안보를 위한 국제협력의 범위는 취약한 국가의 안정과 안전의 문제까지 포괄하게 된다. 국가실패는 분쟁과 저개발에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가실패에 대한 대응책은 결국 평화와 개발의 문제로까지 연결된다. 핵안보를 위해서는 부도덕한 정권의 핵물질 통제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부도덕한 정권을 지지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또한 핵물질을 보유한 국가가 위기상황에 처해서 테러집단에 의한 핵물질의 탈취가 우려될 경우 핵물질의 방호를 위해 외부적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주권침해라는 국제법적 문제도 낳을 수 있다. 국가실패의 가능성으로 인해 핵안보 국제협력은 이러한 윤리적 문제, 국제법적 문제를 수반한다.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는 핵안보 협력에 관한 최초의 대규모 정상회의로서 의미가 크지만, 논의의 범위는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여기서 살펴 본 세 가지 문제들—혜택과 비용의 불균형, 상이한 우선순위, 국가실패—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핵안보 강화에 수반되는 기술적, 행정적 난관과 더불어 핵안보 국제협력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핵안보 강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들 장애요인들은 어떤 식으로라도 해결이 되어야 할 문제이다. 핵안보를 강화하고자 한다면 2010년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에서와는 달리 우리가 개최하는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이들 문제를 다루고 해결방안을 다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 4.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개최배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을 전파하여 왔으며 당선 후인 2009년 4월 프라하 연설을 통해서도 핵무기 없는 세상을 비전을

다시 강조하였다. 이는 2008년 조지 슐츠, 헨리 키신저, 윌리엄 페리, 샘 닐 4인이 Wall Street Journal 기고문을 통해 밝힌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을 계승한 것이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핵감축, 핵비확산, 그리고 핵안보라는 3개의 축이 필요하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프라하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4년 이내에 모든 취약한 핵물질의 안보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선언하고, 2010년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그 후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9월 UN 안보이사회를 직접 주재하여 프라하 연설과 핵안보정상회의 개최제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만장일치 지지를 얻어내어 핵안보라는 개인적 관심이자 미국적 우선순위를 국제사회 공동의 과제로 격상시켰다. 그 결과 2010년 워싱턴에서 개최된 핵안보정상회의는 핵안보와 관련하여 주요국의 정상들이 모두 참여한 최초, 유일의 회의로서 그 의미가 지대하다. 2010년 4월 12~13일에 열린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에서 47개국 정상과 UN, IAEA, EU의 수장이 참석한 가운데 총 11개 분야에서 50개 이행조치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핵안보 관련 작업 계획(work plan)에 합의하였다. 특히 이 회의에는 NPT 체제 밖의 핵보유국인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까지 참석하였다.

### (1) 2010년 워싱턴 핵안보 정상회의의 성과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1</sup>

첫째, 개별 국가 내 모든 핵물질과 핵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방호를 유지하고 비국가행위자가 핵물질을 악용하기 위한 정보와 기술의 회득을 방지하는 것이 국제의무에 따르는 책임임을 재확인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국내 입법과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둘째, 핵무기에 사용되는 고농축 우라늄과 분리 플루토늄의 관리를 위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핵물질의 보안, 계량, 통합 조치를 촉진한다. 또한 경제적,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농축 우라늄 원자료를 저농축 우라늄

---

<sup>1</sup> 이 부분은 전봉근(2011a)에서 정리한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공동성명의 내용을 전재한다.

으로 전환하고 고농축 우라늄의 사용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셋째, 기술개발, 인적자원개발, 교육훈련 등을 통해 핵안보문화(nuclear security culture)와 핵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양자, 지역, 다자적 국제협력을 촉진한다.

넷째, 핵안보에서 민간분야와 원자력 산업계의 역할을 평가하고, 방호, 물질계량, 안보문화를 보장하기 위해 산업분야와 협력한다.

이러한 공동성명을 근거로 미국은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에서 각국의 정상들이 핵테러가 인류의 당면하고 있는 최대의 실제적인 위협이며 세계 모든 나라가 핵테러의 대상이 되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공동의 인식이 실제로 얼마나 확고한 것인지는 시간을 두고 관찰이 필요하다. 공동의 인식이 확고한지는 궁극적으로 워싱턴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이 실제로 얼마나 이행되는 지에서 살펴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 (2) 2012년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의 의의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2010년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이루어진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을 독려하고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에서 국가 간의 입장차이로 합의가 힘들었던 사안에 대해서도 새로이 합의도출을 시도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국내외적으로 핵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서 어떤 식으로라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핵안전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즉,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핵안보협력을 위한 합의의 이행과 도출, 논의의제 등에 있어서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보다 진일보한 회의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작된 핵안보협력의 강화를 위해서 2차 핵안보정상회의의 개최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2차 핵안보정상회의가 반드시 한국에

서 개최되어야 하는 필연적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로부터 정상회의는 개최지 선정이 민감한 사안이었다(Melissen, 2003). 특히 각국의 정상이 참가하는 만큼 개최지의 안전과 보안은 전통적으로 중대한 고려사항이었고, 최근에 들어서는 반대시위로부터 안전이 보장되고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고려사항의 하나가 되고 있다. 안보적 측면에서 보면 서울은 북한의 존재로 인해서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최적지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이 선택된 데에는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를 주도한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긴밀한 점과 한국이 그간에 증진된 국가역량을 바탕으로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의욕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국제사회적으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개최는 핵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기회이지만, 개최국가 한국에게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개최는 한미관계를 재확인하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확대하는 계제가 될 것이다. 또한 한국이 중견국가라는 점에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국제사회에서 중견국가의 역할이 신장된 모델 케이스로 평가 받게 될 것이다.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의 서울 개최에 대해 이러한 긍정적인 해석이 주를 이루지만 보다 조심스러운 해석도 가능하다. 부시 행정부 하 테러와의 전쟁 시 미국과 영국이 국제적 여론과 상관없이 매파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비판을 받은 것처럼, 핵테러에 대한 국제적인 위협인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미국에 경도되어 핵안보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혹자는 평가할 지 모른다. 다행히 부시 대통령과 달리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좋고,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비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지지를 보이고 있어서 이러한 해석은 타당성이 적어보인다. 하지만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의제가 미국 중심으로 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우리나라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장국이라는 평판을 얻기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후술하겠지만 의장국으로서, 모범적인 중견국가로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의제는 세계각국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핵안보를 논하는 대규모 다자 정상회의의 의장국이라는 역할과 위상은 중견국가로 부상한 우리나라의 국격에 걸맞고 국제사회로부터 도움만 받다가 드디어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국가로 다시 태어나려는 우리의 염원과도 일치한다. 하지만 사상 유례가 드문 대규모 다자 정상회의를 준비하고 개최하는 것은 금전적, 비금전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드는 일이다. 그리고 후술하듯이 대규모 다자 정상회의의 ‘고비용, 저효율’의 속성 상 많은 비용을 들여서 회의를 개최해도 회의가 별 성과 없이 끝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고비용’의 많은 부분을 담당한 의장국으로서 그 어느 참가국보다도 실망과 타격이 클 것이다. 보다 냉소적인 시각에서 보면, 만약 의장국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여러 가지 장애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핵안보정상회의를 조직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국가적 실익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만약 회의를 통해서 핵안보가 강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안전해지는 것은 미국이지 아마도 한국은 아닐 것이다. 6자 회담의 성공이라면 몰라도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안보적 이익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물론 국익의 개념을 넓게 정의해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나 대형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평판을 얻는 것까지 국익이라고 본다면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이 의미가 있고 회의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만약 국익의 개념을 보다 협소하게 잡는다면 핵안보정상회의의 개최는 성공적인 경우조차도 우리에게 별 다른 실익을 가져다 주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과연 무엇이 국익을 구성하는지, 국익의 추구하는 것과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또 어떻게 합치될 수 있는지는 쉽게 답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 연구도 당연히 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줄 수 없지만 그래도 문제를 제기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 II. 대규모 다자 정상회의: 역할과 한계

국제적인 현안을 다루고 국가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논의가 일련의 대형 정상회의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추세이다(Melissen, 2003).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수차례 소집된 G20 정상회의나 이 연구에서 살펴보는 핵안보 정상회의도 바로 그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다루는 현안이나 참여국가의 구성에서는 다르지만 형태적으로 모두 일련의 대형 정상회의이다. 참여국가 구성에 있어서 G20 정상회의는 참여국가의 자격이 주요국으로 제한된 ‘간부회의’라고 한다면, 워싱턴 정상회의는 참여가 개방된 ‘총회’ 같은 성격이다(Han, 2011). 이렇듯 참여국가의 구성이나 참여국가 자격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G20 정상회의와 핵안보정상회의 모두 종래의 양자 또는 소규모 다자 정상회의를 크게 상회하는 참여규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는 참여국가가 크게 확대되어서 그동안 핵비확산 국제협력과 원자력 국제협력에서 배제되어 왔던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까지도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대규모 다자 정상회의가 되었다.

### (1) 정상회의의 증가요인

각 국가의 최고위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상회의”라고 명명한 사람은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명명한 것과 정상회의가 외교의 중요한 형태나 장으로서 등장하게 된 것은 실은 무관하지 않다. 각 국가의 최고위 지도자가 참석하는 회의는 윈스턴 처칠이 1950년에 정상회의라고 명명하기 전에도 있었지만 정상회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윈스턴 처칠의 명명이 있을 즈음에서 이다. 그 이전에는 정상회의가 흔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은 미국 대통령이 최초로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이 1919년이었다는 사실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러다가 2차 대전 중 그리고 2차 대전의 종전 이후의 기간 중에는 다수의 정상회의가 전쟁의 수행과 전후처리에 대한 주요국 정상들의 논의가 있었다. 그 이후의 기간 중에 수많은 정상회의가 있어왔는데 처음에는 안보문제를 중심으로 한 양자, 또는 삼자 정상회의가 주를 이루다가, 70년대 들어서부터는—특히 브레튼우즈 시스템의 붕괴 전후하여서는—안보뿐만 아니라 국제경제질서의 재건 등 여러 가지 현안을 논의하는 다자 정상회의가 빈번하게 개최되기 시작하였다.

정상회의의 증가를 가능하게 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기술적인 원인으로는 교통과 운송 수단의 발달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항공기의 발달로 인해서 각국의 대통령과 수상들은 과거에 비해 훨씬 편리하게 또 단시간 내에 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과거와 같았으면 외교부 장관이나 외교관이 대신하였을 외교적 업무를 대통령과 수상이 직접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또한 TV의 보급도 한 몫을 하여 정상회의는 각국의 지도자들이 국민들 앞에 자신들을 노출, 부각시킬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민주화로 인해 일반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과 수상의 선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각국의 대통령과 수상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정상회의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발전처럼 정상회의가 많아지게 된 또 다른 ‘객관적’ 이유로는 2차 대전 이후 신생독립국가의 탄생으로 정상회의 수가 많아진 점도 들 수 있다. 그 결과 양자적 정상회담의 수가 급증한 것은 물론 수적으로 많아진 정상들을 한 자리에 모으기 위해서는 다자적 정상회의의 개최가 필요하게 되었다. 한편 정상회의 중 적지 않은 비중이 지역 정상회의인데 지역 정상회의가 증가하게 된 것은 세계도처에서 지역주의가 강화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정상회의가 증가하게 된 ‘주관적’ 요인으로는 정상회의에 대한 높은 기대를 들 수 있다. 정상회의라는 명칭을 만든 윈스턴 처칠을 비롯하여 많은 지도자들과 일반 국민들이 정상회의에 대하여 높은 기대를 가졌다. 물론 이러한 기대가 다 실현된 것은 아니었고, 정상회의는 단지 프레스용의 사치스러운 홍보행사에 불과하다는 비판적인 견해도 이제는 만만하지 않다. 하지만 정상회의가 증가하게 된 이유로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점에는 변함이 없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정상회의는 단순하게 양자 회의와 다자 회의로 구분할 수 있고, 다자회의는 참가하는 정상회의 수에 따라서 엄밀한 개념은 아니지만 소규모 회의와 대규모 회의로 구분할 수 있다. 소규모 정상회의의 예로는 한중일 정상회담, G5, G8 등을 들 수 있고, 대규모 정상회의로는 G20와 이 연구에서 살펴보는 핵안보정상회의가 대표적이다. 70년대 이후에, 특히 최근에 들어서 대규모 다자 정상회의가 증가하게 된 이유—보다 정확히는 필요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국제체제가 양극체제에서 점차 다극체제로 변화한 것도

그 중 한 원인이다. 국제체제가 다극화됨에 따라 과거 양극체제에서처럼 미소 간의 양자회담만으로는 부족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경제, 환경, 보건, 안보 등 “high politics” 와 “low politics”를 포괄하는 여러 분야에서 각국이 단독으로 또는 소수 국가들의 협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도 대규모 다자 정상회의가 증가하는 이유이다. 예컨대 기후변화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세계 각국에 미칠 것이기 때문에 기후변화문제는 소수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며 기후변화문제를 논하는 정상회의는 이상적으로 대규모 다자적 정상회의가 될 수밖에 없다. 물론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에 대해 책임이 있거나 기후변화에 대처할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후변화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적 노력은 소수의 책임 있거나 능력이 있는 국가들에 의해서 주도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관련된 국제협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글로벌’이라는 수식어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개최된 G20에는 전세계 모든 국가의 정상들이 참여한 것이 아니고 주요국가의 정상들만이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 이유와 함께 정상회의가 강대국 수뇌 간의 밀실회의라는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즉 대표성과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대규모 다자 회의가 필요하다.

이제 국제화가 무역이나 금융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국가 간의 상호의존도가 높아지고 한 국가나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다른 국가나 지역에도 즉각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후진국과 약소국도 과거보다 훨씬 더 큰 목소리를 가지고 국제사회의 운영에 참가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소규모 다자 정상회의나 대규모 다자 정상회의가 빈번해지는 것은 불가피하여 보인다. 또한 국제협상에서 다루는 많은 사안들이 이제는 외교부장관이나 대사 혼자서 다룰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여러 부처의 관여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최고 의사결정자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제협상이 장관이나 실무자급이 아니고 정상급으로 높아지는 추세이다.

## (2) 정상회의의 한계

이상에서 살펴 본 여러 가지 이유로 정상회의, 특히 다자적 정상회의가 빈번해지고 요구되는 추세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상회의가 반드시 문제해결에 최적의 국제협의 형태는 아니다. 많은 문제들이 각국 정상이 다루기에는 기술적이고 복잡하며—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정상회의의 안건으로 올라오기 전에 일찌감치 해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다자적 정상회의, 특히 대규모 다자적 정상회의의 경우에 정상들간의 의미 있는 논의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많은 정상회의가 실질적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언론홍보행사로 변질되는 이유이다. 국제적 논의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상회의를 다자화, 대형화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정상회의가 고비용화, 저효율화하게 된 것이다. 특히 다루는 문제가 복잡하고 기술적이며,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대통령과 수상의 수가 증가할수록 고비용화, 저효율화가 증가하여서 정상회의의 성공적 운영이 어려워진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서 정상회의, 특히 대규모 다자 정상회의에서는 실질적인 논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1) 실질적 논의를 하겠다는 선언적인 행사가 되거나 (2) 실질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난 후 이행결과를 점검하는 계기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많은 경우 정상회의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대규모 다자 정상회의의 경우는 특히 성공을 위해서 사전 또는 사후에 각국의 실무진들의 긴밀한 준비와 협조가 필요하다. 이 또한 용이한 작업이 아니라서 대규모 정상회의의 경우 각국 실무진 간의 연락과 공조에 현실적으로 많은 애로가 있다.

정상회의가 증가되는 추세이지만 정상회의의 대규모화, 다자화, 그리고 주제의 복잡다양화로인해서 실제로 정상회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대규모 다자 정상회의에는 장애요인이 따른다. 하지만 한국과 같은 중견국가들에게는 이러한 문제들이 기회로 작용할 수가 있다. 사전 또는 사후 작업이 복잡다단해 질수록 의장국의 책임과 역할, 그리고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즉, 정상회의의 ‘애로’가 개최국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개최국가가 중견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촉매자, 촉진자, 운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과 의욕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대규모 다자 정상회의의 ‘애로’는 외교적 기회이다.

### Ⅲ. 중견국가 외교

강대국이 중심이 되고 그 외의 국가들의 역할이나 위상이 미약하였던 냉전기 양극체제하의 국제정치와 달리 오늘의 세계에서는 강대국뿐만 아니라 중견국, 경우에 따라서는 약소국들도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나름대로의 역할을 찾아가고 있다. 이러한 국제정치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여 국제정치연구에 있어서도 한국과 같은 중견국가의 역할, 위상, 전략 등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Cooper, 1997; 김치욱, 2009; 김우상, 2011). 하지만 논의에 있어서 중견국가, 중진국, 중추국가, 미들 파워(middle power)가 혼용되며 용어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중견국가와 중진국가의 외교에 관한 연구는 아직도 성숙이 필요한 단계이다.

#### 1. 중견국가의 개념

중견국가를 뜻하는 용어가 통일되지 않은 중요한 이유는 중견국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현실주의적 전통에 속하는 연구에서는 강대국만을 국제정치의 중요한 행위자로 보기 때문에 중견국가에 대한 관심이 낮고 따라서 중견국가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자 하는 시도가 부족하였다. 결과적으로 중견국의 위상이나 역할, 전략에 관한 연구도 진전되지 않았다. 만약 현실주의적 전통의 연구에서 중견국가들 명확하게 정의하려는 시도하였더라도 그러한 시도가 만족할 만한 정의를 낳기에는 현실주의적 연구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현실주의에서 국가에 대한 구분은 국력의 대소를 기준으로 하게 될 것인데 (1) 국력의 측정이란 본질적으로 부정확한 작업이고 (2) 만약 국력의 측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중견국가는 단순히 국력의 규모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좀 더 설명하자면 현실주의 전통의 연구에서 국가는 문화나 이념, 평판과 같은 주관적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객관적 국력, 특히 군사력과 경제력의 대소에 의하여 강대국, 중견국, 약소국 등으로 구분된다. 중견국가란, 강대국처럼 강한 군사력 - 특히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이나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약소국보다는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우월한 중간 범주를 구성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그동안 호주, 캐나다, 스웨덴, 네덜란드 등이 서구 중견국가의 예로서 많이 언급되었고, 최근 들어 그 외 지역의 중견국가로서 브라질이나 인도, 그리고 한국이 많이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군사력과 경제력을 어떻게 정확히 측정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왜 군사력과 경제력만이 국력의 구성요소가 되어야 하는지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 소프트파워 또는 연성 권력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많은 연구자와 실무자에 의하면 국력은 실제로는 활용하기 어려운 군사력보다는 가치, 도덕성, 평판과 같은 무형의 자원에 의하여 많이 좌우된다고 한다. 소프트파워가 권력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냉전의 시대도 아닌 오늘날의 국제정치현실에서 군사력의 대소에 집착하는 것은 분명 시대착오적 측면이 있다.

국력의 측정이나 국력의 구성 문제를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주의적 전통의 연구에서 중견국가를 구분하고 정의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중견국은 갖고 있는 ‘자원’—군사력이든 소프트파워이든—의 규모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태’의 여하에 따라서 정의된다고 한다. 이는 어떤 국가가 단지 강대국과 약소국의 중간수준의 해당하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중견국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중견국가처럼 역할하고 중견국가처럼 행동을 하여야 중견국가라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중견국가를 행태적으로 정의할 때 발생하는 문제는 과연 무엇이 중견국가적인 역할과 행동이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의 연구는 일반적으로 중견국가라고 인정되고 있는 국가들의 행태로부터 귀납적으로 중견국가를 규정하는 역할과 행동을 도출해내고 있다. 예컨대 호주, 캐나다, 스웨덴, 네덜란드와 같은 국가들의 행태를 관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중견국가를 규정하는 역할과 행동을 찾아내는 것이다. 다른 방법은 연역적인 것으로 중견국가를 다자주의 외교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국가라고 다분히 규범적으로 정의하고 그러한 정의로부터 중견국가의 규정하는 역할과 행태를 도출해 내는 것이다. 중견국가를 행태적으로 정의할 때 발생하는 이러한 방법론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실제 결과에 있어서는 비슷한 국가들이 중견국가로 구분되고 있기 때문에 방법론적 차이는 당초 생각한 것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중견국가 외교에 관한 한 연구에 의하면 중견국가는 촉매자(catalyst), 촉진자(facilitator), 관리자(manager)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한다(김치욱, 2009b).<sup>2</sup> 이들 역할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래의 각주에서 언급한 이유로 인해 파악하기 힘들지만, 대략적으로 중견국가는 국제적 논의에 있어서 새로운 의제를 제안하는 역할(촉매), 협상력 강화를 위한 연합을 구축하는 역할(촉진), 국제협력의 제도화와 이해조정에 기여하는 역할(관리) 등으로 생각할 수 있다.

## 2. 중견국가로서 한국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15대 경제대국이며 군사력도 세계 10위로 평가되고 있다. 인구도 5천만명에 달하고 영토도 크지는 않지만 전통적으로 강대국으로 생각되고 있는 유럽의 일부 국가들에 비해 크게 작지도 않은 편이다. 하지만 계속되는 남북대치, 특히 북한의 핵무장, 그리고 강대국이 우리나라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지정학적인 현실로 인해서 한반도나 아시아에서 우리가 경제적, 군사적 강국에 속한다는 사실을 실감하기 힘들다(김우상, 2011). 달리 말하면 한반도와 아시아에서는 아직 냉전 시대의 국제정치현실이 남아 있어서 한국과 같은 중견국가가 가질 수 있는 행동의 영역이 지금도 협소하다.

한편 한반도나 아시아를 벗어나면 한국에 대한 인식도 크게 달라지며, G20 정상회의나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국과 같은 역할이나 위상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다. 한국은 강대국에게는 요긴한 국제사회의 협력자이며, 후진국과 약소국에게는 배우고 싶은 성공모델이며 교류와 원조를 늘리고 싶은 번영하는 국가이다. 즉, 한국은 많은 국가의 시각에서 중견국가인 것이다.

---

<sup>2</sup> 흥미롭게도 김치욱의 논문에서 근거로 인용한 Andrew Cooper의 편저서 *Niche Diplomacy: Middle Powers after the Cold War*의 24 페이지와 25페이지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다. 아울러 Andrew Cooper의 편저서 색인에서도 촉매자, 촉진자, 관리자라는 항목을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촉매자, 촉진자, 관리자에 관한 논의는 Andrew Cooper의 편저서 대신 전적으로 김치욱의 설명에 근거한 것이다.

### 3. 한국의 중견국가 역할론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보면 한국은 상대적 국력 면에서 냉전 직후부터 이미 중견국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GDP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이미 1990년에 전세계 14위로 부상하였고, 그 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10 순위 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한인택, 2010a). 후진국을 벗어나는 통과이레로 종종 생각되는 올림픽 게임 유치도 1988년에 한 것을 생각하면 국력 면에서 한국이 중견국가 수준에 달한 지 벌써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 그러나 행태 면에서는 최근에, 특히 2010년 서울 G20정상회의 의장국과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의 직을 맡으면서 한국이 본격적으로 중견국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견국가 수준의 국력 달성과 중견국가적 행태 사이에는 이러한 괴리가 존재하는 만큼 상대적 국력만으로 중견국가를 정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중견국가적 행태를 위해서는 우선 중견국가적 국력이 필요하다는 면에서 국력에 근거한 중견국가 정의는 그 타당성을 찾을 수 있다.

상대적 국력만으로 규정되는 중견국가에서 행태적 속성으로도 중견국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약 20년의 기간은 한국이 변화한 국력에 걸 맞게 인식이 변화는 과정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즉, 이 기간 중 중견국가 수준으로 국력이 신장되었고, 그에 따르는 인식의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그리고 난 후에 대외적으로 중견국가적 행태를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견국가적 인식변화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것은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이 처음으로 보인다(이정희, 정기웅, 2010). 하지만 동북아 균형자론이 등장하자마자 바로 강력한 비판에 부딪힌 사실은, (1) 중견국가에 걸 맞는 역할과 전략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과 (2) 한국이 중견국가라는 사실에 대해 한국 내에서 그때까지 공통된 인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당시의 비판이 한국이 중견국가가 되었다는 점에 대한 부정이라기 보다는 한국이 중견국가인 점은 맞되 한국에게 맞는 역할이 동북아 균형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을 수도 있다. 당시의 논쟁을 다룬 한 연구에 따르면 동북아 균형자에 대한 비판론은 (1) 균형자라는 개념이 현실주의 세력균형

론에 기반을 둔 시대착오적 개념이라는 주장, (2) 균형자가 되기에는 한국의 국력이 부족하다는 주장, (3) 균형자적 역할과 한미동맹이 공존할 수 없다는 주장, 그리고 (4) 동북아 균형자론이 모호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주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배종윤, 2008). 따라서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비판은 우리나라가 중견국가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을 부정하기 보다는 중견국가의 적합한 역할이 동북아에서 균형자가 아니며 동북아에서 균형자가 되기에는 국력이 부족하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외교안보의 비전으로 ‘연성 강국’으로서의 ‘성숙한 세계 국가’를 제창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했던 것과 같은 비판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이 같은 추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가 중견국가로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제 국내적 공감대가 있으며, 그 역할도 동북아를 넘어서 범세계적으로 지구촌 공통 관심사에 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처방을 내리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달리 말하면, 동북아 지역 균형자가 되기에는 우리나라의 국력이 아직도 열세이지만 동북아를 벗어나 국제적 무대로 나서면 우리는 중견국가로 인정받고 활동할 수 있는 경성 권력과 연성 권력이 이제는 갖춰졌다는 점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공감대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서브 프라임 위기의 발생으로 G20 정상회의가 출범하고, 한국과 미국에서 새 행정부가 들어서고 양국관계가 강화된 것은 한국이 전 세계 무대에서 중견국가로 등장하는 데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국은 이미 의장국으로 성공적으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였기 때문에 대규모 다자 정상회의에 관한 한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중견국가의 역할—촉매, 촉진, 관리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Ⅳ. 핵안보정상회의와 한국의 중견국가 외교

### 1. 정상회의와 중견국가

2차 대전 이후 정상회의가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정상회의의 종류도 처음에는 주요국 간의 양자회의가 주를 이루더니 점차 다자화되기 시작하여 70년대, 80년대에는 소규모 다자 정상회의가 빈번히 열리다가 최근 들어서는 대규모 다자 정상회의로 발전하는 추세이다. 논의되는 주제도 과거에는 군사나 안보와 같은 high politics가 중심이었으나 점차 high politics, low politics를 포괄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논의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살펴보고 있는 핵안보정상회의는 대규모 다자 정상회의의 좋은 예이며 논의되는 주제도 대단히 기술적이고 복잡하다.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대규모 다자 정상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한국과 같은 중견국가들의 책임과 역할이 증대되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과거의 강대국 간 양자 정상회의나 주요국만 참가하는 소규모 다자 정상회의에 한국과 같은 중견국가는 배제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런 회의를 통해서도 우리의 국익도 증진할 기회가 없었고 우리가 국제사회에 기여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 정상회의의 다자화와 대형화, 그리고 주제의 전문화와 다양화는 한국과 같은 중견국가들이 국제적 논의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정상회의의 다자화와 대형화로 이제 한국 등 중견국가들은 국제적 논의에서 배제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나아가 정상회의 규모의 확대, 주제의 전문화와 다양화는 중견국가들이 국제적 협력과 논의의 촉매자, 촉진자, 관리자로서 적극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한국의 중견국가로의 부상과 대규모 다자 정상회의의 증가추세는 상승적으로 국제협력에서 한국의 역할과 위상을 높여서 우리가 잘 활용하면 국익도 증진하고 국제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 향후 우리 외교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이 같은 기회를 유지하고 최대한 활용하는 것

이 될 것이다. 이런 기회는 과연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기회가 계속 유지된다면 어떻게 하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까?

정상회의의 증가, 정상회의의 다자화와 양자화, 논의주제의 전문화와 다양화는 국제정치현실의 변화로 인해 불가피하고 변화된 국제정치의 현실에 대한 적응이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종래의 배타적이고 비밀적인 강대국 정상들간의 회동에 비해서 고비용, 저효율이 될 가능성이 상시 있다. 대규모 다자 정상회의에서는 각기 다른 배경과 이해관계를 가진 참가자들 다수가 모여서 짧은 시간 내에 복잡한 문제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도출될 수 있는 합의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참가자들이 공통으로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형식적 합의가 될 위험성이 있다. 만약 어떤 경위를 통해서 그보다 더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다양하고 이질적인 참가자들이 그 합의를 이행할지는 미지수이다. 만약 정상회의, 특히 대규모 다자 정상회의가 고비용, 저효율의 제도라는 인식이 증가할 경우 정상회의를 통한 우리의 역할 증대나 국익증진은 여의치 않게 된다. 만약 우리가 대규모 다자 정상회의의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벗고 나선다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의 국익증진을 뒷전에 놓게 될 가능성도 있다.

정상회의는 말 그대로 국가정상들이 참여하는 국제협의이기 때문에 참가하는 정상의 관심이나 성향, 언어구사능력, 그리고 다른 정상과의 관계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계속 정상회의를 통해서 국익을 증대하고 국제사회에도 기여하고자 한다면 대통령 스스로가 정상회의를 통한 외교에 대해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많은 국내외적 사안을 다루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정상회의에 관심과 열의를 가지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국민들도 대통령 선거에서 정상회의에서 능숙한 외교가 가능할 정도로 경험과 언어구사능력을 가진 후보자를 뽑는 것이 우선순위는 아니다. 개별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정상회의에 능한 후보자보다는 자신과 출신지역이나 이념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거나 자신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해 줄 후보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명실상부하게 중견국가로서 부

상한 한국에게 때마침 활성화되고 다자적 정상회의 외교는 국익을 증진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둘째 그러한 기회의 창이 반드시 계속적으로 열려 있을 보장은 없다. 다자적 정상회의의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와 유용성이 감소할 수 있다. 셋째, 정상회의의 증가가 중견국가의 외교에 주는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대통령의 존재가 선결조건이라는 것이다.

## 2. 핵안보 협력을 위한 의장국 한국의 역할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유례가 드문 대규모의 정상회의로서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 이어서 국제사회가 국제금융과 핵안보 분야에 있어서 각각 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핵안보 강화는 바람직한 것이지만 핵안보 강화를 통해 얻게 되는 혜택은 소수의 국가-미국 같이 국제적으로 테러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국가-들에 편중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핵안보 강화를 위해 지불되는 비용은 각국이 스스로 부담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핵안보는 고사하고 재래식 안보, 인간 안보에도 여력이 없는 개발도상국으로서 핵안보 강화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형편이 좀 나은 국가들의 경우라도 핵안보보다는 핵안전이나 핵비확산이 더 시급한 과제일 경우가 많다. 특히 후쿠시마 사태 이후 핵안전을 강화하고 핵사고의 발생 시 국제적 협력체제의 구축,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우리가 핵안보정상회의의 의장국이지만 우리에게도 핵안보보다는 핵안전과 핵비확산이 더 절실한 실정이다. 결국 핵안보 강화는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혜택에 있어서는 소수 국가로 편중되며, 그에 따르는 비용부담은 원하건 원하지 않건 그리고 부담할 여유가 있건 없건 간에 다수의 국가가 하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혜택과 비용의 관계는 비록 핵안보가 바람직한 것일지라도 핵안보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핵안보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혜택과 비용의 불균형, 상이한 우선순위의 문제, 국가실패의 문제가 어떤 식으로라도 해결되어야 한다. 중견국가

로서 한국은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 선정되기 이전부터 가교국가의 역할을 자임하고 선진국가와 개발도상국가, 강대국과 약소국의 이해를 조율하는 데 관심과 의지를 보여왔다. 핵안보 강화에 내포되어 있는 혜택과 비용의 불균형 때문에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 동안 한국이 천명해 온 가교국가로서 역할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 (1) 혜택-비용의 불균형문제

혜택을 많이 받는 국가들의 부담을 늘리고, 혜택을 적게 받거나 부담능력이 없는 국가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우리가 제시하고 지지를 얻어낼 수 있으면 핵안보 강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에 실질적인 진전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합의가 된 대로 핵물질 관리의 기본적인 책임을 일률적으로 개별국가에 지우기 보다는, 책임과 비용을 분리하여 책임은 계속 개별국가에게 지우되 비용부담은 경감하거나 분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예컨대 비용부담은 ‘혜택’에 따라 하거나(수익자 부담의 원칙), ‘능력’에 따라 하는 방안(능력자 부담의 원칙)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원칙을 당장 수용하거나 실행하기가 힘들다면—예컨대 핵안보로부터 받는 혜택을 구체적인 액수로 수량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행이 쉽지 않다—당분간은 선진국이나 국제기구의 원조와 지원을 통해서 핵안보 강화에 따르는 개별국가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방안도 제안해 볼 만하다.

한국은 2011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주최국으로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핵안보 국제협력과 국제개발협력을 연계시킬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잘 갖추고 있다. 물론 핵안보정상회의와 세계원조총회는 각기 고유의 목적과 의제를 지닌 별개의 행사이다. 하지만 양 행사의 주최국으로 한국이 창의적으로 핵안보의 문제와 경제개발의 문제를 연결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볼 만하다.

## (2) 상이한 우선순위문제

핵안보 강화와 관련된 비용과 부담의 불균형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넓게 핵안보, 핵안전, 핵비확산 간의 우선순위가 국가나 지역마다 다르다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도 우리가 창의적으로 이슈를 연계한다면 국가간 협력을 유도해 낼 수 있다. 핵안보에 우선순위를 두는 국가들이 핵감축에 우선순위를 두는 국가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가로 핵감축을 우선시 하는 국가들이 핵안보 협력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예컨대 미국의 핵감축 노력이 미비하다고 비판하면서 핵안보 협력에 소극적인 국가들이 있다면 한국이 핵감축도 핵안보정상회의의 의제로 올리고 미국에게 핵감축의 양보를 받아냄으로써 핵감축을 우선시 하면서 핵안보 협력에 소극적이었던 국가들의 협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의장국으로 다른 어떤 중견국가보다도 이러한 조정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3) 국가실패의 문제

국가실패와 핵안보의 문제는 우리로서는 이론적 문제만은 아니어서 가까운 경위로 북한의 붕괴 시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와 핵물질의 방호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등장할 수 있다. 물론 북한의 붕괴 시 북한의 보유한 핵무기와 핵물질을 외부의 테러리스트가 탈취해서 한국의 공격할 위협은 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 내 일부 강경세력이 핵무기와 핵물질을 탈취 또는 은닉해서 한국을 위협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서 국가실패의 발생 시 이러한 안보적 문제뿐만 아니라 핵무기와 핵물질의 방호를 놓고 우리는 물론 주변강국이 개입하려고 할 것인데 이에 따르는 외교적, 국제법적 문제도 또한 만만치 않다.

국가실패 시 발생하는 안보적 위협, 외교적, 국제법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국가실패 시 이루어질 국제협력에 관하여 논의하고 미리 국제적인 공감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문제이다. 앞서서도 언급하였지만 부도덕한 정권의 존재로 인해 국가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집권 정부를 지원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또한 위기 시 외국의

개입은 복잡한 국제법적, 외교적, 군사적 문제를 수반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대규모 다자 정상회의에서는 복잡한 문제를 다루기 어렵다. 바로 핵안보와 국가실패는 대규모 다자 정상회의에서 다루기 힘든 문제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북한 때문에 우리로서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국가실패 시 핵안보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따라서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적어도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핵안보를 위한 국제협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촉매자, 조정자, 운영자가 필요하고 의장국으로서 한국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책임과 기회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서울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한국은 대규모 다자 정상회의에서 성공적으로 중견국가 역할을 수행해본 경험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성공적인 주최는 한국이 국제사회에 기여하며 동시에 외교적 역량과 위상이 증대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증대된 외교적 역량과 위상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절실한 북한 붕괴 시 핵무기와 핵물질 방호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면 핵안보정상회의는 우리의 국익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김우상, “중견국 외교 협력방안 모색: 한국과 호주 중심,” 제주평화연구원 발표문, 2011.12.
- 김치욱, “국제정치의 분석단위로서 중견국가(Middle Power): 그 개념화와 시사점,” *국제정치논총* 제49집 1호, 2009a
- 김치욱, “G20의 부상과 중견국가 한국의 금융외교,” *국가전략* 15권 4호, 2009b
- 배종윤, “동북아시아 지역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 ‘동북아 균형자론’을 둘러싼 논쟁의 한계와 세력균형론의 이론적 대안,” *국제정치논총* 제48집 3호, 2008.
- 이정희, 정기웅, “G20과 중견국가 역할론: 한국 외교 전략의 모색과 투-페이스 게임,” *한국시민윤리학회보* 23집 2호, 2010.
- 전봉근, “핵안보정상회의 성과와 과제,” *주요국제문제분석*, 2010.5.18
- 전봉근, “핵안보 정상회의 개최 배경과 기대,” *Issue Brief No.3*,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2011a
- 전봉근, *미국핵안보정책변천연구: 1991~2010*, 외교안보연구원, 2011b
- 전봉근,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의미와 핵안보 쟁점,” *주요국제문제분석*, 2011c
- 조현,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의의 및 준비방향,” *외교96호*, 2011
- 한인택, “한국외교 역량분석과 평가 (2012-2020),” 2010a.
- 한인택, *아시아지역국가위협분석*, 제주평화연구원, 2010b.
- 한인택, “핵폐기 사례연구: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례의 함의와 한계,” *한국과국제정치* 27권 1호, 2011
- Allison, Graham, *Nuclear Terrorism: The Ultimate Preventable Catastrophe*, Times Books, 2004.
- Allison, Graham, “Nuclear Deterrence in the Age of Nuclear Terrorism,” *Technology Review*, November/December 2008
- Cooper, Andrew, ed., *Niche Diplomacy: Middle Powers after the Cold War*, Macmillan, 1997
- Dunn, David, *Diplomacy at the Highest Level: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Summitry*, Macmillan, 1996.
- Duun, David, “Summit Diplomacy: High-Level Meeting or Courtesy Call? A Response to John Young,” *The Hague Journal of Diplomacy*, Vol. 2, Issue 2, 2007
- Han, Intaek, “Nuclear Disarmament: Logic, Illogic, and Dilemmas of a Nuclear-

Free World,” *IFANSReview*, Vol.17, No.2, 2009

Han, Intaek, “US-Asia Relations beyon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APacific Nation*, Japan Center for International Exchange, 2011

Melissen, Jan, “Summit Diplomacy Coming of Age,” *Discussion Papers in Diplomacy*, No.86, Netherlands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Clingendael, 2003

Young, John, “A Case Study in Summitry: The Experience of Britain’s Edward Heath, 1970-74,” *The Hague Journal of Diplomacy*, Vol. 1, Issue 3, 2006